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14 / Feb. 2018

02



재정 인사이트

기획 특집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지역 활성화

재정칼럼

재정정책영역에서 닛지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증거 기반 경제정책의 수행방안
효율적 정책과 리서치랩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열린재정 개편의 배경과 특징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예산성과 우수사례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행복

Photo Essay
포토에세이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

재정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었고
경제 위기의 방파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이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대한민국 재정.
아이들의 내일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재정의 더욱 탄탄한 운영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움직입니다.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고 투명하게 일궈나가도록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당국을 위한 똑똑한 재정 참모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FEBRUARY
2018 Vol. 14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지역 활성화
재건축, 재개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고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12 재정칼럼

재정정책영역에서 넋지의 적응가능성과 한계
강은숙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증거 기반 경제정책의 수행방안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효율적 정책과 리서치랩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정과 정보

24 이슈포커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박정수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열린재정 개편의 배경과 특징
최승림 dBrain운영본부 예산정보팀 차장

37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46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사업

50 예산성과 우수사례

의료업자 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54 해외재정동향

미국의 연방예산과정과 정부 섯다운
일본 2018년 예산안의 특징

64 풀어쓰는 경제 · 재정이야기 ②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의 세금정책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지역 활성화
재건축, 재개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고옥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재정칼럼

재정정책영역에서 닛지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강은숙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증거 기반 경제정책의 수행방안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효율적 정책과 리서치랩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지역 활성화 재건축, 재개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고옥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kouks@korea.kr

Urban Regeneration

정부는 지난 12월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의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닌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쇠퇴한 구도심은 살리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정비와 재개발에 집중하면서 도시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는 도심에 내재된 역사와 기억, 건축물의 의미 등 도시재생의 인문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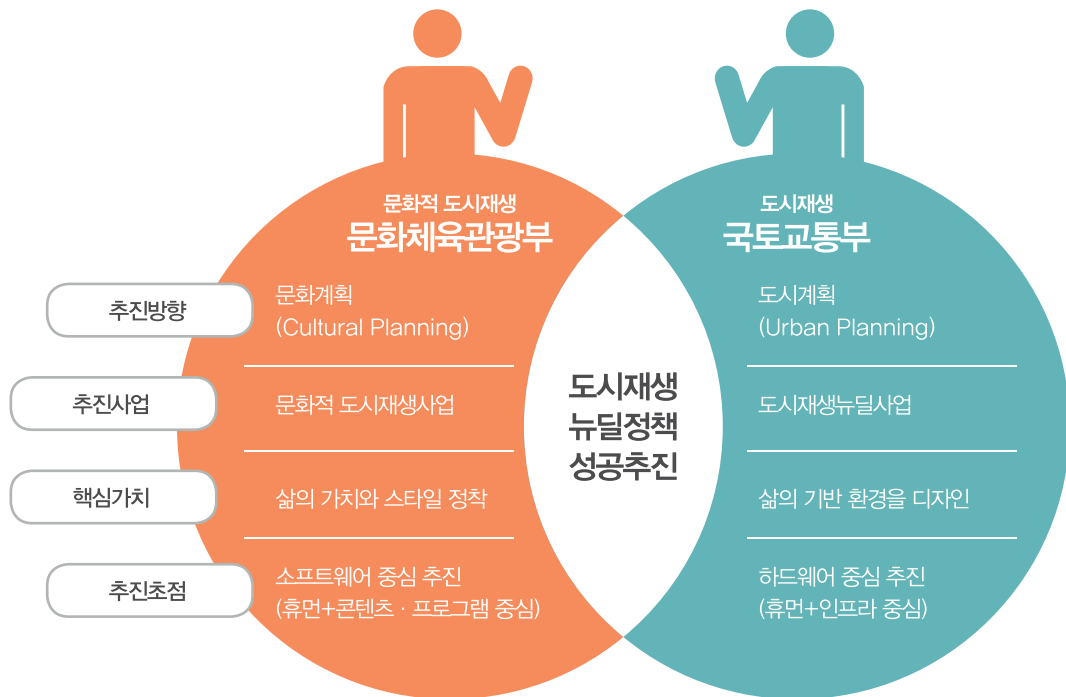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문화재생사업이란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침체된 도심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꾸며진 도시에서 떠났던 청년이, 예술가가, 원주민들이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나가는 것이다. 즉 문화재생은 무분별한 물리적 개발의 부작용을 막고, 도시에서 ‘장소 기반의 문화’를 만드는 정책과 사업이다. 문화재생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역사·전통이나 산업 유산을 활용하는 방식,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 낙후된 도심에 예술가 공동체를 정책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요 가치와 해외 도시재생 성공 모델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적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시재생과 지역문화가 기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문화재생은 문화적 삶의 장소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돼 상호 구별된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삶의 가치와 스타일을 정착하는 문화계획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삶의 기반 환경을 디자인하는 도시계획을 지원하며, 도시-문화 분야 정책적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화리더가 사회를 만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에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리더를 양성해 지역의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지

역 청년활동가, 문화 분야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기획 실무교육을 지원한다. 우수 성과자는 지역문화시설에 배치되어 실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해 청년 문화인력 간 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기반 활동들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화리더가 도시를 이끌고 공공은 보이지 않는 후원자로서 '교육 - 프로그램 기획·실행 - 네트워킹'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최근 민·관 파트너십의 방향이다.

문화적 활동이 지역을 변화시킨다

기존의 공간과 장소 또는 도시재생으로 확충된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적 활동을 통해 도시에 생기를 더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적 창작, 향유, 교육, 복지,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그 지역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입, 마을기업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생활문화공동체, 마을미술, 인문활동가 파견, 문화가 있는 날 등 일상에서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과 관광두레(지역주민 관광사업 공동체), 체험형 시티투어 발굴 등 관광자원 활용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적 장소가 지역을 재생한다

도시재생을 도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활동이 멈춘 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장소로 재활성화하는 사업들도 최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버려진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등의 조성사업이 이 범주에 속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해당한다.

경기도 광명시는 쓰레기 소각장과 부속공간을 활용해 재활용 주제의 생산기지, 연구소, 문화예술 전시·체험·교육 공간인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조성했으며, 충북 청주에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골목길, 소규모 강연, 세미나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녀노소 재봉실은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인천 주안의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 누구나 뉴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마을방송이 활발하며, 주안 미디어 문화축제 등 미디어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외 작은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공간 관련 사업들을 기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





1 주안 영상미디어센터
2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3 청주 생활문화센터



지역 문화역량 제고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문화적 공간 조성 관련 사업은 운영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지역 간 네트워킹 워크숍과 포럼 등의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가 시대를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추구하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이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특화된 문화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람과 공간,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쇠퇴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재생에 특화된 문화도시를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도시-문화 분야 협업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문화도시 지정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법사위원회를 통해 참여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지 중 문화재생에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공동 컨설팅과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강은숙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eskang@kmou.ac.kr

재정정책영역에서 넛지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을 비롯한 실험심리학, 뇌과학, 진화생물학 등의 연구에서 밝혀낸 인간은 때로는 감정에 의해, 때로는 사회규범에 따라, 또 때로는 자신이 지닌 문화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이타적이기도 하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성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policy intervention)을 모색한다. 정책적 개입은 정부의 지시나 규제의 형식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며 통상 ‘넛지(nudges)’¹라고 부른다.

¹ ‘넛지’는 ‘팔꿈치로 살짝 건드리다’, ‘(~을 특정 방향으로) 조금씩 밀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직접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간접적, 유도적 방식의 정책개입을 의미한다.

재정정책 영역에서의 도입 필요성

재정정책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 및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부의 개입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크게 정부지출정책과 조세제도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위해서는 조세수입이 필요하므로 공공재정은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정학자들은 최적의 조세규모와 적절한 조세부담 방식을 위한 세련된 정책수단을 개발해왔다.

한편, 정책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어야 의도했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정학에서는 새로운 조세의 도입 시 예측되는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나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납세자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의 판단은 정보 부족 혹은 부재, 감각 기능 및 인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은 이기적 선호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는(other-regarding) 선호를 지니며 상호적 이타성(reciprocal altruism)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행동경제학에서 밝혀낸 현실적인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설계를 한다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증세에 따른 저항, 조세회피 등 조세의 집행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각과 행동경제학의 시각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 할 수 있다.

비합리성의 패턴 및 뇌지의 적용 가능성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휴리스틱과 편향²으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손실회피 편향(loss aversion bias), 기준점 이론(reference theory)을 들 수 있다.

특정 선택과 관련된 행동 및 결과,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자가 생각하는 관념을 가리켜 의사결정 프레임이라 한다. 의사결정자가 채택하는 프레임은 문제의 제시방법에 따라, 때로는 의사결정자의 규범 및 습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 한다. 손실회피 편향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한 인간은 절대소득이나 부

² 휴리스틱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렵셈과 유사하다. 휴리스틱이나 편향은 인간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빠른 판단과 선택을 이끌어 생존을 돕기도 하지만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초래해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효용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점에 의해 기준점을 형성한다. 그 후 자신의 기준점보다 크면 이익(gain), 작으면 손실(loss)의 감정을 경험한다. 만족도의 크기는 이익구간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기준점 근처 손실구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때는 느리게 감소한다. 공공재정 영역에서도 상기된 연구결과³에 기초해 행동경제학의 개념을 활용한 넛지를 다음의 네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증액되는 세금을 절대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피실험자들은 일관되게 절대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퍼센트로 표현할 때 보다 누진적인 조세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금액으로 표현하면 동일한 세율하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세구조가 '누진적이라는 인식 오류(progressivity illusion)'가 발생한다.

둘째,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때 '○○세'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요금' 혹은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인식하면 그 이름 자체가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일종의 '프레이밍 효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꺼이 조세의 형태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화재 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인 정부서비스의 경우에는 기꺼이 조세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범이 개입될 경우 자신의 기준점이 변하면서 조세 지불용의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세금고지서의 앞부분에 표기하면, 타인의 납세율이 규범으로 작동하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심리적 수치심을 손실로 인지하여 손실회피 편향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납부율을 높인다.

넷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조세회피는 '새로운 조세를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저항이 없지만, 세금이 오르거나 새로운 조세가 만들어질 때 손실회피 편향이 작용하면서 납세자들

³ McCaffery, E. J. (2004). Toward an Agenda for Behavioral Public Finance. Cleo Research Paper Series: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pp. 1-28; McCaffery, E. J. and Baron, J. (2004). Thinking about Tax. USC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No. 04-13, pp. 1-38; Poterba, J. M. (2002). Recent Developments In and Future Prospects for Public Economics. American Economist, pp. 20-30을 참고하십시오.



행동경제학의 의의와 한계

의 조세저항이 커진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 상태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따라서 집권 초기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때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것이다.

넛지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의 정책적 개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장점을 지닌다. 첫째, 명령지시적 방식(mandate and ban)과 비교할 때 행위자들의 선택의 자유 및 다양성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이다. 둘째, 관료들도 제한된 정보를 지니고 있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좀 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엄밀한 설계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셋째, 관료들은 잘 조직된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넛지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즉 규제나 명령방식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되면 규제집행에 있어서 관료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특수이익집단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넛지와 같이 정책대상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은 '선의의(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설계자'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를 지닌 정치지도자가 행동경제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게 되면 인간의 비합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책대상자를 상대로 프레이밍 효과를 비롯한 관련 휴리스틱과 편향이 적절히 작동되도록 유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다 나은 정책을 주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보다 좋게 들리도록 하는 사람이 정치과정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행동경제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그에 따라 공공재정 시스템이 국민들의 진정한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tkim@cju.ac.kr

PUBLIC FINANCE COLUMN



증거 기반 경제정책의 수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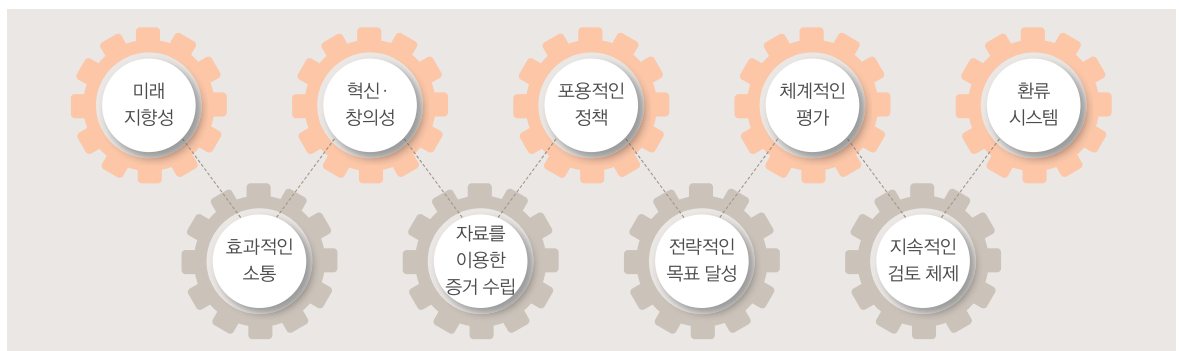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특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는 특정 명제나 가설이 과연 성립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실험실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가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실험자는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환경을 일정한 조건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 환경에 대한 실험은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연과학에서 실험과 사회과학에서 실험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실험의 결과 특정 명제나 가설이 성립하지 않아도 즉 실험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실험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실패는 현실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예로서 정부가 화폐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 수년 동안 인플레이션만 야기하고 실물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정부의 팽창통화정책 실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일찍이 1999년 영국에서 열린 사회과학연구소협회가 주관한 증거 기반 정책에 관한 학회에서 개념이 제시되고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증거 기반 정책의 수행을 요구하는 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대강 9가지로 요약된다.¹ 효과적인 정책수립절차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통계적 추세에 기초하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장기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은 국내외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관련 주체들과 효과적인 소통을 통하여 대외 지향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정책은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선의 증거를 이용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최초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경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윤리적이고 법적인 토대하에 정부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여야 될 것이다. 정책은 집행초기부터 산출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은 최초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과 기타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정책수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다시 정책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특정정책을 추진할 때, 과학적 실험은 수행할 수 없지만 기대효과를 예상하기 위해 가급적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증거 기반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이다. 증거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을 구체적인 양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정책이 고려되는 경우 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정부정책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 9가지



¹ 본 내용은 "Strategic Policy Making Team, (1999). Professional policy mak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London: Cabinet Office"를 참조하여 정리되었다.

이 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을 제도적으로 착근할 수 있는 실행방안(action plan)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설정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여야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성 입증에 필요하다. 예로서 우리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파악하려는 것도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골격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재정사업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사회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 기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와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제주체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추적하여야 되는데 관련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 과거의 환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과거 자료를 이용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최선의 예측 또는 최적의 예측은 예측치의 편(bias)이 없고 분산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특정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와 반응에 대한 최선의 예측을 위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이다. 자료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기본이나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패널 자료도 많다. 연구자가 특정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거시 자료와 미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 기반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된 Data Base 구축이 선결조건이 된다. 관련 DB가 구축된 다음 연구자들이 DB가 필요한 경우 DB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DB에는 국내외의 주요 DB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들과 국책연구기관 및 주요 민간연구소들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DB들과 함께 OECD, IMF, World Bank와 UN이 발간하는 DB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증거 기반 재정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조세·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관련 DB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이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증거 기반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중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증거 사이: 효율적 정책과 리서치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과거 상승폭으로 보나 다른 나라 사례로 보나 인상폭이 크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인상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과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혹은 그 반대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올 1월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성급하다. 시행된 지 한 달이 겨우 지났기 때문이다.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에 대해 심하게 논쟁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엉뚱하게 고용안정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불거져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메워준다고 해도 돈을 받

아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고용주도, 심지어 노동자들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업장 규모, 임금수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의 최근 지시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편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행동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이 비윤리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라고 요청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건의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행 성과를 평가한 이후에 2019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했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기금을 신청할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지, 임금 상한액을 얼마나 책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강제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완된 상태에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Research
Lab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대규모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2020년까지 최소 두 번 큰 폭의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내년과 내후년을 위해서라도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특성을 매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정책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했다. 사후에 자료를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다. 사전적으로 디자인해서 정책의 일부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알기에는 그러한 정책은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과 같이 재정이 지속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조의 경우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도 믿음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고, 시행 중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리서치랩(Research Lab)이다.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돕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혁신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Innovation, I3)'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증거에 기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구자로 구성된 팀을 꾸렸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의통제실험을, 중규모 예산의 경우에는 준자연적 실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좀 더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후 I3 프로그램은 증거에 기반한 다른 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기준이 되었다.

리서치랩을 통해 기존 정책 결과들을 정리 및 보관하고,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자료체제(Integrated Data System)를 구축하고, 관련 부처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과세, 부동산, 고용 자료 등은 통합하여 정책 형성, 실행,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리서치랩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은 믿음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거기에 정치 바람이 더해지면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시행되고는 한다. 효과성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느리지만 증거에 기반한 정책이어야만 한다. 정책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정책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만 한다. 리서치랩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박정수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열린재정 개편의 배경과 특징

최승림 dBrain운영본부 예산정보팀 차장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사업

예산성과 우수사례

의료업자 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해외재정동향

미국의 연방예산과정과 정부 셋다운

일본 2018년 예산안의 특징

풀어쓰는 경제 · 재정이야기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의 세금정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박정수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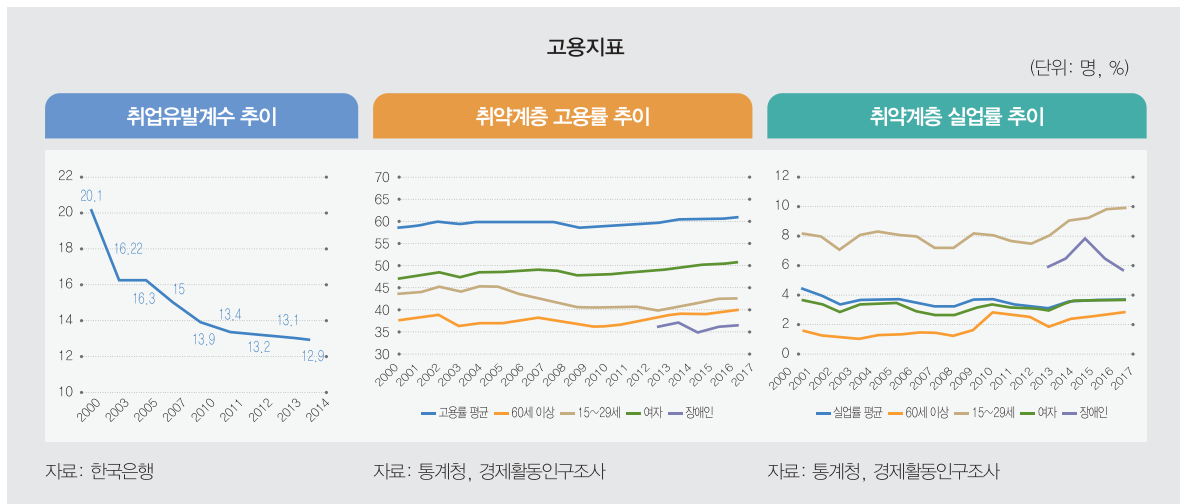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총 19.2조 원이다. 이는 2017년 본예산 17.1조 원, 추경예산 18.2조 원에 비해 각각 12.8%, 5.5% 증가한 것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실업을 줄이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일자리사업은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집행체계 개편이 실시된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과제(주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재정관리 점검회의의 집행 점검을 받게 되며, 2018년부터는 일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해 평가·관리를 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배경과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대상인 취업 취약계층은 고용이 부진한 청년층, 여성, 노령자, 장애인 등이다.¹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고용률 정체(2000년 58.5% → 2017년 60.7%)와 취업유발 계수 둔화(전산업 2000년 10억 원당 20.1명 → 2014년 10억 원당 12.9명), 그리고 고용지표가 정체하는 중에서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별로 고용지표를 살펴볼 경우 청년은 고용률, 실업률(각각 43.4% → 42.5%, 8.1% → 10.4%), 노령자와 여성은 실업률(노령실업률 1.5% → 2.8%, 여성실업률 6.7% → 8.3%) 등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 2013년 36%, 5.9% → 2017년 36.5%, 5.7%) 여전히 평균보다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실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취업 취약계층의 낮은 참여 비율, 한시적 공공 일자리가 민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 사업간 복잡한 추진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일자리사업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사업 정비 및 효율화’ 추진이 결정되고,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체계 정비², 취업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해 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¹ 청년의 정의는 정책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인턴제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대상이 명확한 반면,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원범위가 넓다. 반면 노령자의 정의는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OECD 통계를 따라 청년은 만 15~29세, 노인은 정책 정의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통계를 제시한다.

² 중앙에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 노사민정협의체를 설치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고용영향평가사업 대상 등을 심의·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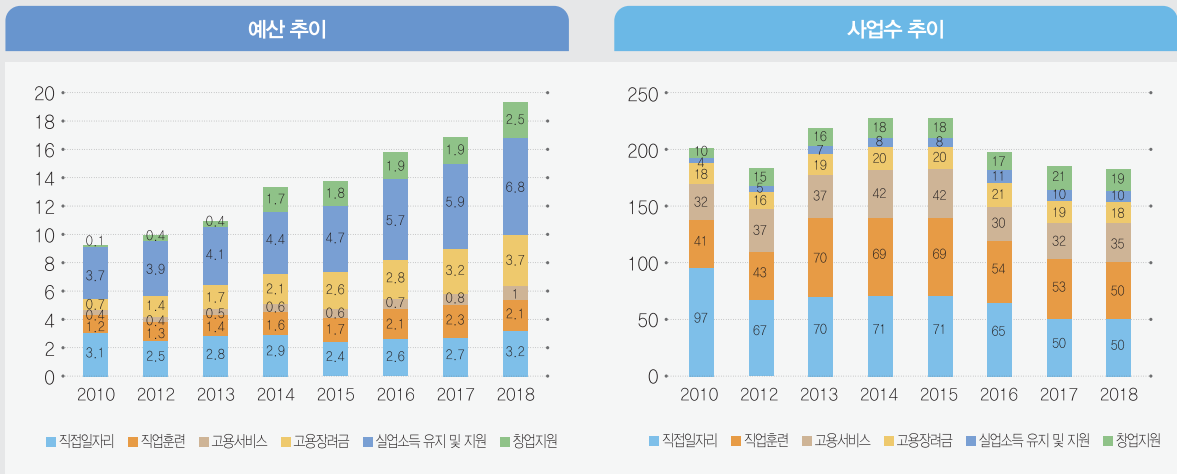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OECD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기준을 토대로 6개로 분류하고 있다.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 등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며,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 등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다.³

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실업소득 유지·지원(6.9조 원), 고용장려금(3.7조 원), 직접일자리(3.2조 원), 창업지원(2.5조 원), 직업훈련(2.1조 원), 고용서비스(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수는 전년도보다 2개 줄어든 183개이다.⁴

회계·기금별로 볼 경우, 일반회계 지출사업은 전체 77개 사업 중 고용노동부(14개), 보건복지부(13개), 기타(1~8개) 순이다. 일반회계 지출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형태가 많으며, 자기 부담이 없는 특징이 있다. 반면 실업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간 현황

(단위: 조 원, 개)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사업수)	9.2 (202)	9.9 (183)	10.9 (219)	13.2 (228)	14 (228)	15.8 (198)	17.1 (185)	19.2 (182)

주 1) 예산은 2017년까지 본예산, 2018년은 예산안 기준임

2) 사업 수는 각 연도별 지침 기준임

자료: 부처 합동, 각 연도 합동지침

부처 합동,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비계획(2010)

KDI, 「나라경제」 2017년 가을호

3 구제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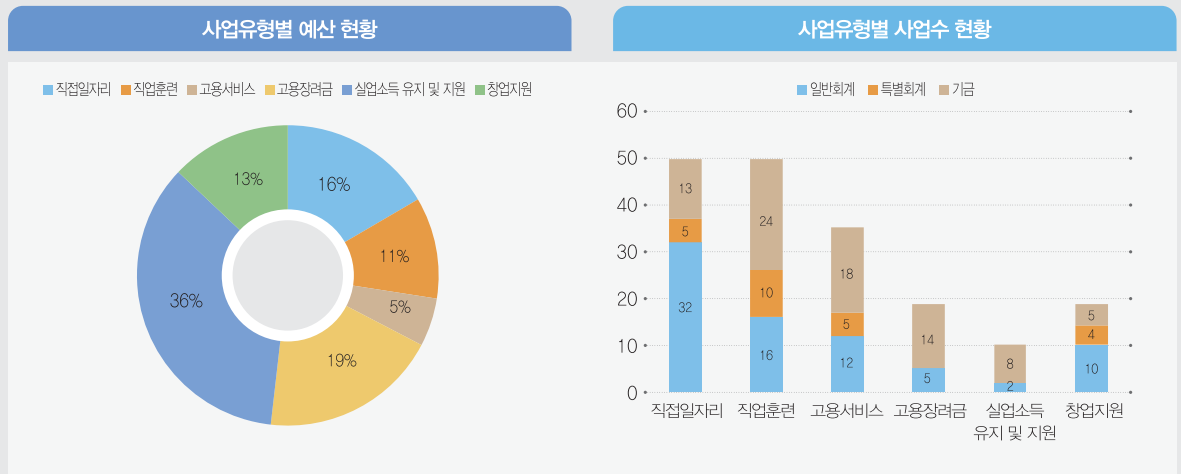
4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 전문 연구사업 등 신규 사업 편성 외에 북한이탈주민센터 사업 통합 등 재정사업 개편에 따른 것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는 2010~2011년도(202개 → 183개), 2016~2017년도(228개 → 185개)였다(고용노동부, 2017).

득 유지와 같이 평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실업 시 돌려받는 형태의 사업은 기금 형태로 추진된다. 기금사업은 82개로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17개), 고용장려금(14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8개) 등 기금사업이 많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39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7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5개) 등이 수행 사업수가 많으며, 이 3개를 제외한 17개 기금에서 1~4개 내외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징수 및 사업 수행 형태의 예를 들면 고용보험기금은 징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수행하며, 고용보험의 급부 중 하나인 구직급여(퇴직일부터 12개월 지급)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 수행한다.

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개, %, 조 원)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창업 지원	계
예산액	3.2	2.1	1.0	3.7	6.9	2.5	19.2
사업수	50	50	35	19	10	19	183

자료: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지침(201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8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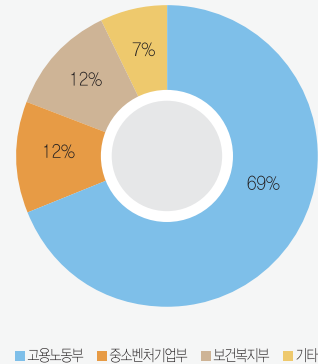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수행된다. 2018년 수행되는 183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71개 사업에서 13.2조 원을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사업에서 2조 4천억 원, 보건복지부 13개 사업 2조 3천억 원을 집행하며 이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93.2%를 집행한다.

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및 사업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조 원, %)

일자리사업 부처별 예산

부처별	사업수	예산	사업당 예산
고용노동부	71 (38.8)	13.2 (68.8)	0.18
중소벤처기업부	14 (7.7)	2.4 (12.5)	0.17
보건복지부	13 (7.1)	2.3 (12.0)	0.17
기타	85 (46.4)	0.7 (3.6)	0.02
계	183	19.2	0.10



자료: KDI, 「나라경제」 2017년 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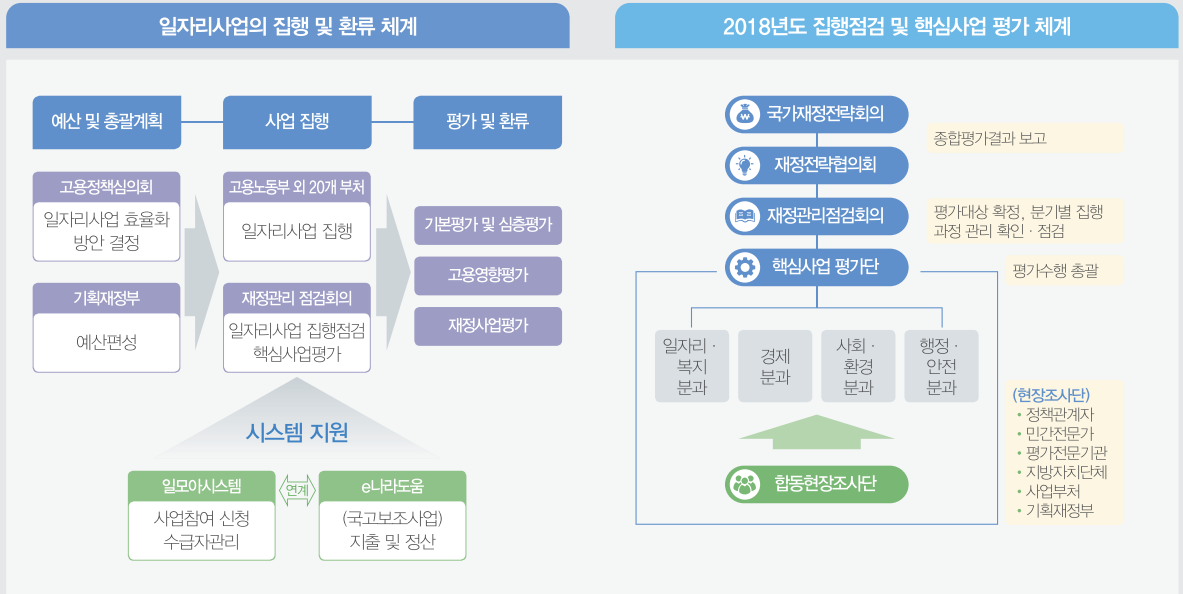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점검·환류 체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개 소관 부처에서 집행하며, 다부처 사업의 조정과 집행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를 통해 집행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상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과제를 담당한다.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보 제공과 신청자·수급자 관리를 위해 일보야 2009년부터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개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연계하여 국고보조 일자리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집행 점검,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각 재정사업의 집행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2017년까지 수행한 집행 과정 관리 확인·점검에 더해 2018년부터 주요 핵심사업 평가를 수행한다. 핵심사업 평가는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메타평가⁵를 대체하는 것으로 주요 관리대상 사업 80개를 선별해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는 것이다. 2018년 핵심사업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각 부처 80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 및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2018. 1. 11.)

사업 23.1조 원 중 일자리사업은 15개 사업 7.8조 원으로 6대 평가대상 사업군⁶ 중 가장 예산 비중이 크다. 핵심사업 평가는 매 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역시 2018년부터 크게 개편된다. 새로운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는 신규·개편 사업에 대한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매년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 기초평가와 3~5회의 전달과정 현장 모니터링 및 고용영향평가, 사업당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심층평가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모니터링 및 다층 평가 결과가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활용될 수 있게 변경되어 예산편성-집행-평가에 이르는 재정사업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⁵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로서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점검해 자체적인 성과 향상 및 지출 구조조정계획을 세우게 하는 제도이다. 개편 전의 제도 하에서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가 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메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⁶ 일자리사업을 제외한 대상 사업군은 성장동력 확충(18개 사업, 4.2조 원), 소득기반 확충(10개 사업, 3.5조 원), 안심국가(23개 사업, 5.8조 원), 인적자원 개발(14개 사업, 1.8조 원)이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 환류가 강화된다.⁷ 개별 일자리사업은 고용효과, 성과지표, 참여자 만족도 등을 종합 검토, 동일 유형 사업 별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5단계로 부여한다. 사업별로 부여된 종합등급을 고려, A등급과 E등급은 각각 원칙적으로 증액과 감액을 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와 전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7년도 직접일자리 계획인원만 76만 4,176명에 달한다. 반면 실업급여와 같이 간접적으로만 고용창출 효과를 관찰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장기실업자 대상 3개월 지급 시)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 원당 10명⁸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의 한 종류인 창업지원사업은 피용자 기준 10억 원당 15명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비일자리사업인 창조 경제밸리(10억 원당 11명),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사업(10억 원당 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고용영향평가의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관찰되는 만큼 이를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다. 성과와 예산에 대한 환류가 크게 개선되는 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관리 및 평가체계는 정책성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 투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재정제도 개선은 운영 과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⁷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2018년부터는 모든 일자리사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⁸ 한국노동연구원 2015년 평가 결과. 이하 고용창출 효과는 모두 간접고용, 피용자 기준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분류와 OECD 통계

한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0년 이후로 아래와 같이 6개로 구분한다.

일자리사업의 유형

직접일자리	공공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
직업훈련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연수원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사업
고용서비스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주 및 구직자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고용장려금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창업지원	간접지원(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컨설팅 등)으로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17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OECD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통계 기준은 한국의 6대 분류보다 더 세분화된 8개로 분류하며, 자활 프로그램, 조기퇴직 관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집계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GDP 대비 2004년 0.27%에서 증가해 2015년 0.67%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전체의 29.8%로 높은 특징이 있다.

2015년도 기준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현황

(단위: %, GDP 대비)

국가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자활	창업 지원	실업유지 및 지원	조기 퇴직	합계
프랑스	0.22	0.37	0.25	0.05	0.09	0.03	1.97	0	2.98
이탈리아	0	0.17	0.1	0.23	0	0.02	1.28	0.01	1.8
그리스	0.01	0.2	0.36	0.02	0.03	0.01	0.86	0.02	1.51
호주	0.01	0.01	0.14	0.01	0.06	0	0.68	0	0.91
캐나다	0.01	0.07	0.12	0.01	0.01	0	0.62	0	0.86
폴란드	0.02	0.01	0.08	0.13	0.17	0.05	0.15	0.13	0.73
이스라엘	0	0.06	0.02	0.05	0.03	0	0.52	0	0.68
한국	0.2	0.04	0.04	0.04	0.02	0.02	0.32	0	0.67
일본	0.01	0.01	0.07	0.06	0	0	0.17	0	0.32
미국	0	0.03	0.02	0.01	0.03	0	0.18	0	0.2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GDP 대비 적극적 노동 프로그램 비중	0.27	0.3	0.33	0.35	0.51	0.82	0.61	0.53	0.61	0.65	0.66	0.67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열린재정 개편의 배경과 특징

최승림

dBrain운영본부 예산정보팀 차장

slchoi@kpfis.kr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누리집(www.openfiscaldata.go.kr)이 2018년 1월 25일 전면 개편되었다. 2015년 7월에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최초 서비스(재정정보 및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제공) 개시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사용자 의견수렴, 제공 통계 확대, 시각화·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개편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제공되던 재정정보의 공개현황과 한계

그간의 노력

정부는 2014년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 2015년 열린재정, 2017년 e나라도움(www.gosims.go.kr) 등의 예산 및 재정 관련 누리집을 차례로 개설하고 연도별 예산 모습(재정혁신타운), 월별 집행현황(열린재정, 부처 홈페이지), 보조금 맞춤형 정보(e나라도움) 등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또한 법적 근거(세입·세출 및 사업설명자료 공개의무 신설) 마련으로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였다.

개편 전후 접속 화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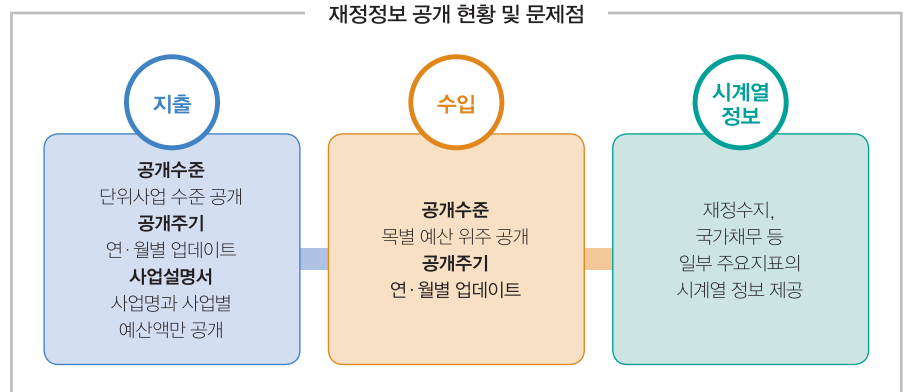
개편 전
(2015년
7월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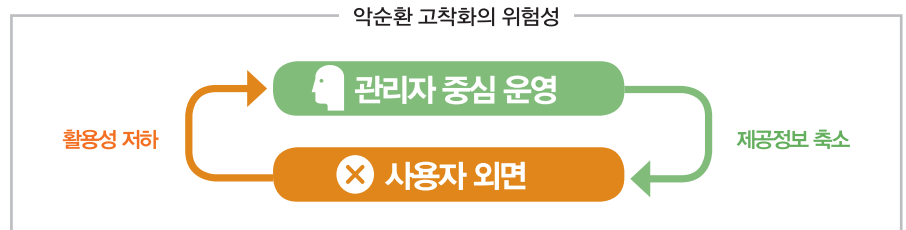
개편 후
(2018년
1월 개통)

개편 배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보의 폭과 깊이, 비효율적·비적시적인 정보 생산·전달 주기, 가독성 낮은 수치 위주의 표현, 사이트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로 인한 어려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야기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는 관리편의 및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 공급자 중심의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정보 공개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족은 정보의 탐색과 활용성에서도 문제를 나타냈다.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단어(국가재정, 재정 등)를 이용한 검색으로 열린재정 누리집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공개되는 수치정보의 일부는 편집이나 복사가 어려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다른 정보와의 융합 및 재활용이 어려웠다.



2 추진 동력과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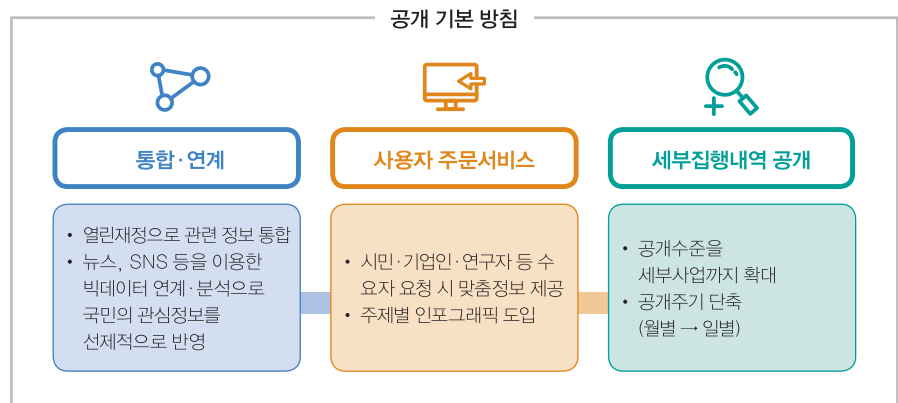
의지(意志) 및 기반

현 정부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제안 중 재정정보 공개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공개 중이던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간의 누리집 개설·운영, 법제화(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및 예산 관련 정보를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 등의 노력은 정보 공개 확장에 있어서 기반 및 디딤돌 역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정보 공개 확장 및 열린재정의 전면개편이 가능했다.

방향성 확립

2017년 7월 20일에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재정정보를 즉시 공개하도록 기본 방향이 논의 및 확정되었으며 통합·연계, 사용자 주문서비스, 세부집행내역 공개를 골자로 기본 방침이 결정되었다.



3 추진 내용 및 결과

사용자 의견 수렴 확대

기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선진사례 벤치마킹(미국(USA Spending), 영국(Where does my money go), 충청남도, 지방재정365)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및 공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실행력 있는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주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모니터링단(100명 내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개범위·주기 개선

지출정보의 단위를 세부사업별, 건별 지출 내역 수준으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공개 주기도 월별에서 일별로 단축하여 사용자가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분석 및 연계에 용이한 시계열 정보 제공 범위를 확장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기존 120여 종에 달하던 재정 통계 정보가 160여 종으로 확대되었다.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

사용자(기업, 국민 등)별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발주사업, 보조금 사업정보 등 맞춤형 수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뉴스, SNS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분석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정보를 공개하였다. 연구자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사용자	공개내용	제공정보
기업	정부 발주사업	정부 발주사업(공사·감리·연구사업 등) 시행부처, 상세 설명자료, 집행현황 제공
	정부 융자사업	맞춤형 정부 융자사업 조회, 금리정보 제공(서비스 예정)
국민	맞춤형 보조금	나에게 맞는 보조금 조회(생애주기·대상·주제별)
	데이터주문 서비스	사용자가 요청한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파일로 제공

정보에 대한 가독성 개선

재정에 관한 국민의 관심사항(재정건전성 주요지표,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2018 예산특징, 정부중점과제 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재정 관련 용어 및 제도의 설명을 웹툰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인포그래픽과 웹툰을 활용한 가독성 개선



인포그래픽



중양재정이란?

관리자, 2017-12-01



예산 및 기금

관리자, 2017-12-01



국유재산

관리자, 2017-12-01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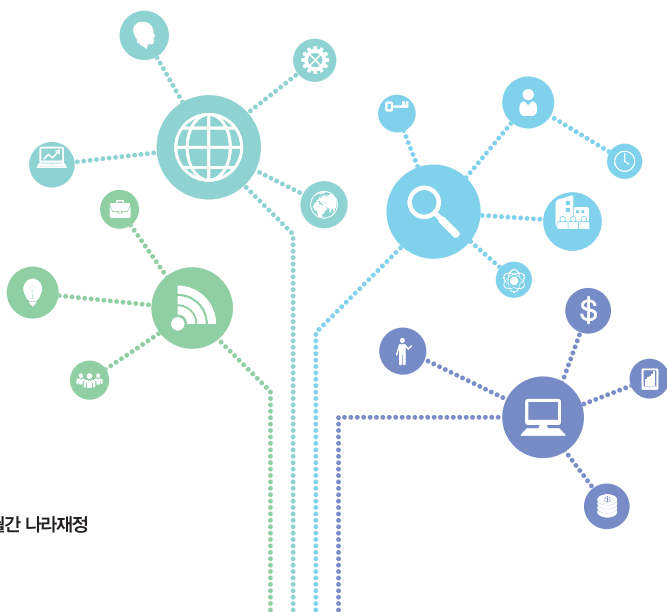
접근성 개선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재정 관련 용어(재정, 정부예산, 정부결산, 재정수지, 재정통계 등) 검색 시 열린재정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환경을 개선하고 포털사이트의 정보공개 서비스(네이버 데이터랩, 학술정보 등)를 활용하여 자료 제공 매체를 확장하였다.

재정혁신타운, e나라도움, 각 부처 누리집, 국내외 경제·통계 시스템(통계청, 한은, OECD, IMF)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 정보를 통합 및 정리하여 공개하고 보다 전문적인 상세 정보는 해당 누리집(공공기관 알리오, KDI 경제정보센터, 통계청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였다. 열린재정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XML, JSON, XLS, CSV, TXT 등으로 다양한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용도 및 기호에 따라 선택·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런 기능들은 열린재정이 재정 관련 통계 및 자료 제공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편은 국가재정에 관한 필요 정보를 ‘한곳에서 한눈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재정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보와 결합하여 재정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한 올바른 재정집행’이라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기대하게 한다. 다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훌륭한 도구를 만들지라도 활용이 저조해지면 그 의미가 퇴색한다. 이는 안정적 관리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유지되도록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 재정통계

총세입·총세출

2017회계연도 총세입은 359.5조 원이며, 2017년 예산¹ 대비 9.6조 원 초과(2016년 결산 대비 14.5조 원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285조 원) 대비 8조 원 초과한 292.9조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64.9조 원) 대비 1.7조 원 초과한 66.6조 원이다.

국세수입은 265.4조 원으로 2017년 예산(251.1조 원) 대비 14.3조 원 초과하였으며, 2016년 대비 22.8조 원 증가하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와 비교하여 법인세는 59.2조 원으로 7.1조 원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67.1조 원으로 5.3조 원 증가하였다. 소득세는 75.1조 원으로 6.6조 원 증가하였다. 세외수입은 94.1조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4.7조 원 감소(2016년 결산 대비 8.4조 원 감소)하였다.

¹ 추경 기준이다.

표 1 2017 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 원)

	2016년 결산	2017년		증감액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① 국세수입	242.6	251.1	265.4	22.8	14.3
일반회계	235.7	244.0	258.5	22.8	14.6
소득세	68.5	69.6	75.1	6.6	5.5
법인세	52.1	57.3	59.2	7.1	1.9
부가가치세	61.8	62.6	67.1	5.3	4.5
기타	53.3	54.6	57.3	3.8	2.6
특별회계	6.8	7.1	6.9	0.1	-0.2
② 세외수입	102.4	98.8	94.1	-8.4	-4.7
일반회계	46.0	41.0	34.4	-11.6	-6.6
특별회계	56.5	57.8	59.7	3.2	1.9
총세입(①+②)	345.0	349.9	359.5	14.5	9.6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9.)

2017회계연도 총세출은 342.9조 원이며, 2017년 예산현액(354.9조 원) 대비 집행률은 96.6%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5조 원으로 예산현액(286.6조 원) 대비 97.9%를 집행하였다. 특별회계는 62.4조 원으로 예산현액(68.3조 원) 대비 91.3%를 집행하였다.

표 2 2017 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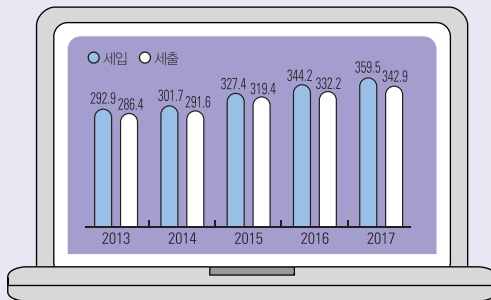
	2016년 결산	2017년		증감액	
		예산현액	결산	전년대비	예산현액대비
일반회계	274.0	286.6	280.5	6.5	-6.1
특별회계	58.2	68.3	62.4	4.2	-5.9
총세출	332.2	354.9	342.9	10.7	-12.0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9.)

그림 1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마감 현황

(단위: 조 원, 결산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	일반회계	232.4	239.2	261.9	281.7	292.9
	특별회계	60.5	59.5	66.2	62.5	66.6
세출	일반회계	229.5	236.4	257.9	274.0	280.5
	특별회계	56.9	55.2	61.5	58.2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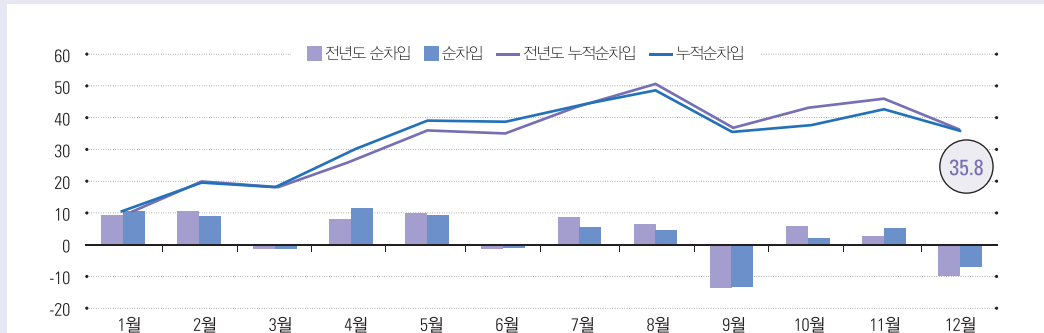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4. 2. 10., 2015. 2. 10., 2016. 2. 5., 2017. 2. 9., 2018. 2. 9.)

국채²

2017년 12월 말 기준 국채 연간 누적 순차입액은 35.8조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다. 12월 국채는 발행 5.9조 원, 상환 15.7조 원으로 전월 대비 6.9조 원 감소했다. 2017년 12월 누적 국채는 623.3조 원이다.

그림 2 월별 순차입 및 누계

(단위: 조 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순차입	9.3	10.3	-1.2	7.9	9.6	-1.0	8.8	6.7	-13.4	5.8	2.9	-9.8
	누계	9.3	19.6	18.4	26.3	35.9	34.9	43.7	50.4	37	42.8	45.7	35.9
2017	순차입	10.6	8.9	-1.3	11.4	9.3	-0.7	5.6	4.5	-12.9	2.2	5.1	-6.9
	누계	10.6	19.5	18.2	30	38.9	38.4	43.9	48.4	35.4	37.7	42.7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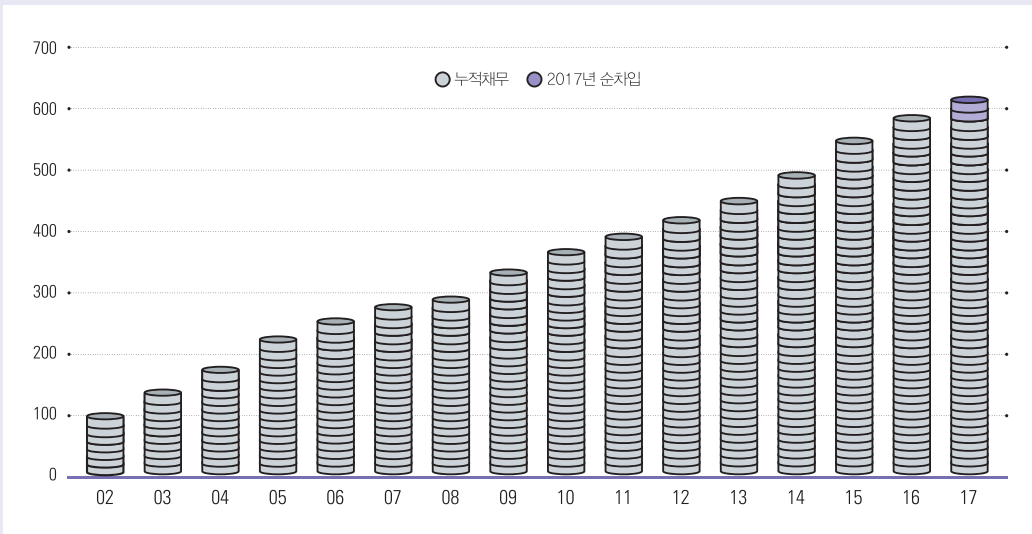
주: 항목별 합계는 단순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8년 2월호

² 국채는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을 합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며 12월 국가채무 현황은 4월에 결산 자료와 함께 발표된다.

그림 3 국채 누적 및 연간 순차입

(단위: 조 원,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국채 누적	103.1	140.6	182.9	229	264.3	280.5	289.4	337.5	367.2	397.1	420	459.5	498.1	551.5	587.5	623.3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8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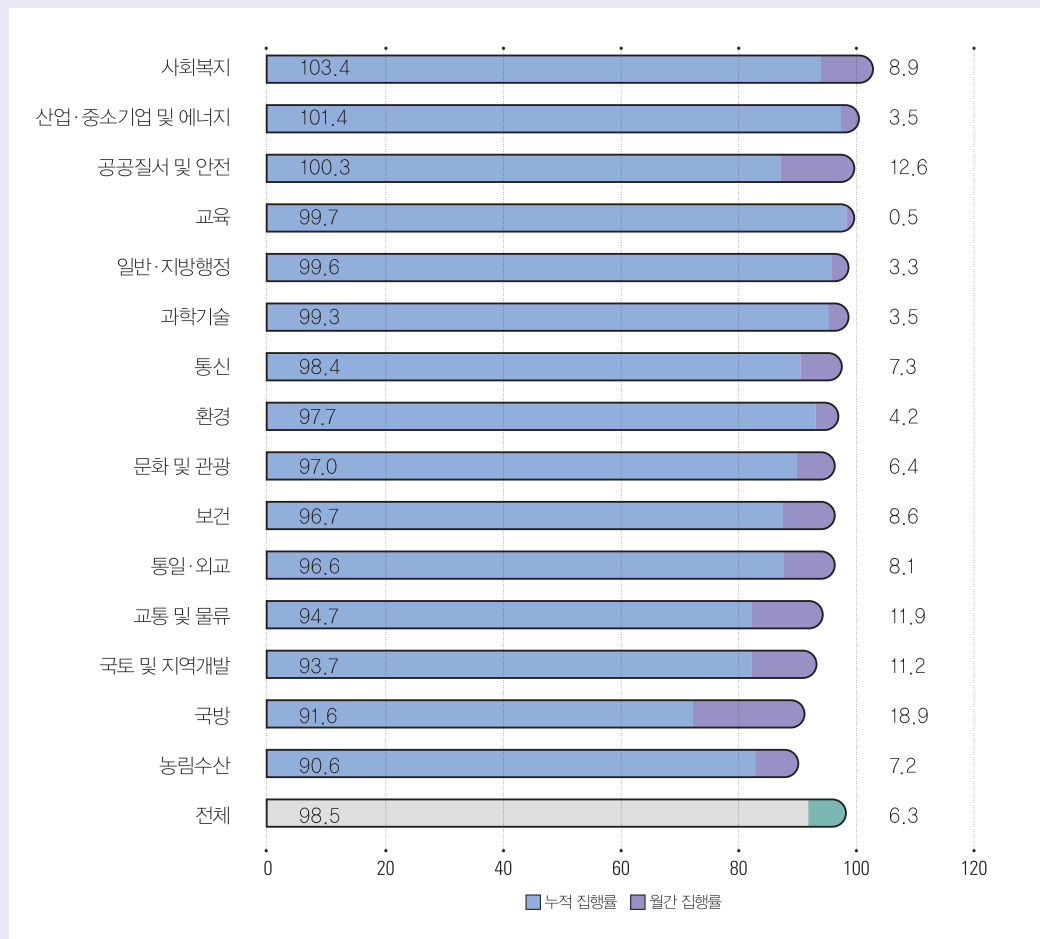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³

20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은 233.8조 원이며,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30.3조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98.5% 집행하였다.⁴

12월 기준 월간 집행률은 국방(18.9%), 공공질서 및 안전(12.6%), 교통 및 물류(11.9%), 국토 및 지역개발(11.2%), 사회복지(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0.5%), 일반·지방행정(3.3%)는 월간 집행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누적 집행률은 사회복지(103.4%),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1.4%), 공공질서 및 안전(100.3%)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³ 기획재정부에서 집계·공개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⁴ 잠정치이다.

2. 테마 통계: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내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매년 2월 10일 까지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으로 확정된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세계잉여금 현황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2월 10일까지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과 세출 실적, 세계잉여금을 확정한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가 마감되면 더 이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수정을 하지 못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에서는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날짜를 확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계잉여금은 목표한 세수를 초과하였거나 실제 지출이 목표보다 적은 경우에 나타난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수입을 총세입이라고 하며, 한 해 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을 총세출이라고 한다. 총세입액과 총세출액의 차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하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내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금액을 제외한 것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1.3조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10.0조 원이며,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이 1.3조 원이다. 2017년 총세입액은 359.5조 원, 총세출액은 342.9조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 원이다. 이 결산상 잉여금은 국채 우선상환액 5,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목적으로 해당연도의 예상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를 상환하였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내년도 이월액 4.9조 원을 제외한 것이 세계잉여금이 된다.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8.0조 원)과 비교해볼 때 전년 대비 3.3조 원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0조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0.7조 원 감소하였다.

2017년 총세입액 359.5조 원은 예산 349.9조 원과 비교할 때 9.6조 원이 초과로 징수되었다.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354.9조 원과 비교할 때 96.6%가 집행되어 342.9조 원이다. 이처럼 목표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하였거나 실제 지출이 예산현액보다 적은 경우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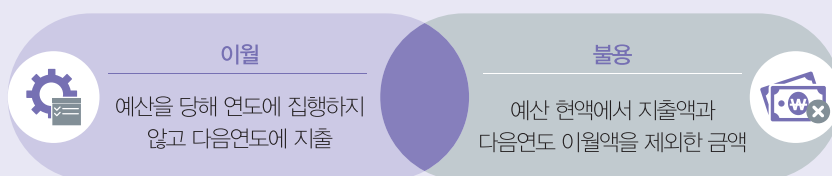
표 1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예산액 (a)	세입액 (A)	세입초과액 (A-a)	세출액 (B)	국채 우선상환(C)	결산상 잉여금 (D=A-B-C)	이월 (E)	세계잉여금 (D-E)
합계	349.9	359.5	9.6	342.9	0.5	16.2	4.9	11.3
(2016)	341.9	345.0	3.0	332.2	-	12.8	4.8	8.0
일반회계	284.9	292.9	8.0	280.5	0.5	11.9	1.9	10.0
(2016)	279.4	281.7	2.2	274.0	-	7.7	1.6	6.1
특별회계	65.0	66.6	1.7	62.4	-	4.2	3.0	1.2
(2016)	62.5	63.3	0.8	58.2	-	5.1	3.2	1.9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9.)



2017년 이월액은 4.9조 원으로 2016년 이월액(4.8조 원)과 비교해볼 때 0.1조 원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이월액과 이월률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로 이월액과 이월률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불용액은 7.1조 원으로 2016년 불용액(11조 원)과 비교해볼 때 3.8조 원 감소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불용액은 18.1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용률 또한 2013년 이후 5.8%에서 2.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이월 및 불용규모

(단위: 조 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불용	불용액	18.1	17.5	10.8	11.0	7.1
	불용률	(5.8)	(5.5)	(3.2)	(3.2)	(2.0)
이월	이월액	7.2	8.0	5.9	4.8	4.9
	이월률	(2.3)	(2.5)	(1.8)	(1.4)	(1.4)

주: 불용률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이월률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9.)

2001년 이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조 원)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D)	세계잉여금 (E=C-D)
2001년	102.0	98.7	3.3	0.9	2.4
2002년	113.4	108.9	4.5	1.2	3.3
2003년	119.7	117.2	2.5	1.3	1.1
2004년	119.6	118.2	1.4	1.2	0.2
2005년	136.5	134.2	2.3	1.0	1.2
2006년	147.9	144.8	3.0	1.7	1.4
2007년	171.2	154.3	16.8	1.5	15.3
2008년	181.6	175.5	6.1	1.5	4.6
2009년	204.9	199.9	5.1	1.5	3.6
2010년	205.2	197.1	8.1	2.1	6.0
2011년	214.9	207.4	7.4	2.3	5.1
2012년	223.7	220.7	3.0	2.2	0.9
2013년	232.4	229.5	2.8	2.8	0.1
2014년	239.2	236.4	2.9	2.8	0.1
2015년	261.9	257.9	4.1	1.5	2.5
2016년	281.7	274.0	7.7	1.6	6.1
2017년	292.9	280.5	11.9	1.9	10.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8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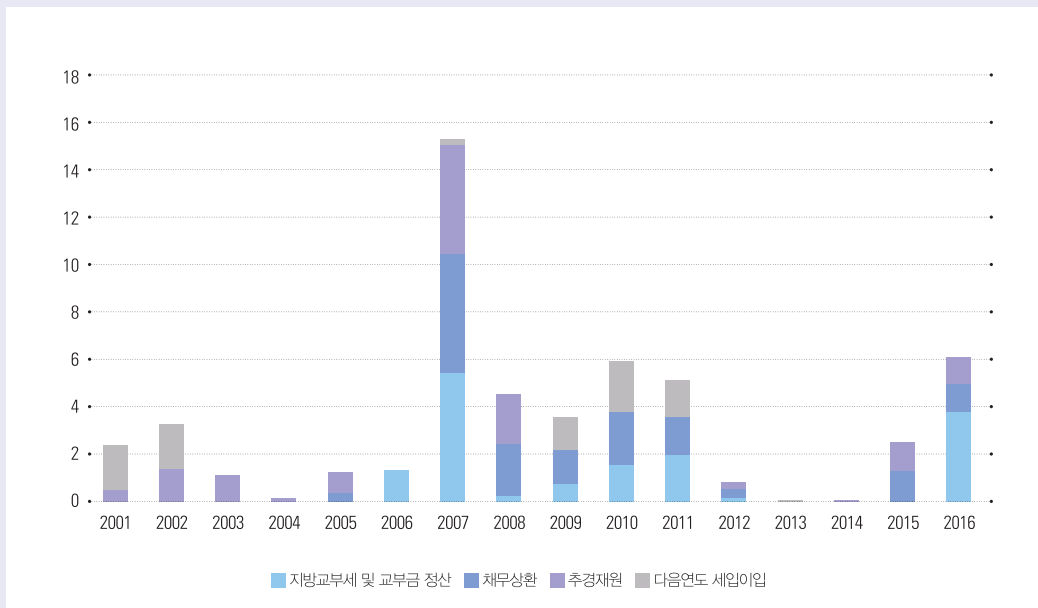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자체재원으로 사용된다. 과거 「예산회계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처리절차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와 비율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한다.⁵ 이 금액을 제외한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를 제외한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거나,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내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전후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사용처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조 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3.8조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1.2조 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1.1조 원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사용 현황

(단위: 조 원)



주: 채무상환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8년 2월호

⁵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한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사업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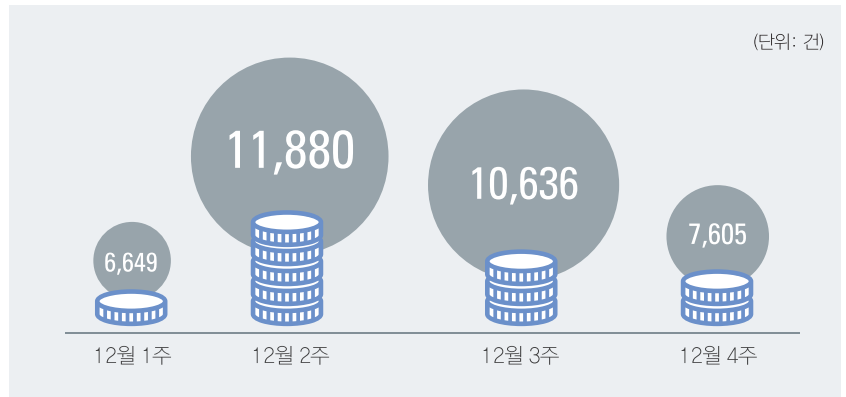


정책여론수렴시스템¹ 데이터 분석 결과,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가상화폐’의 언급량은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 11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연관어로 도출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¹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다(big.pr.go.kr).



2017년 12월 가상화폐 언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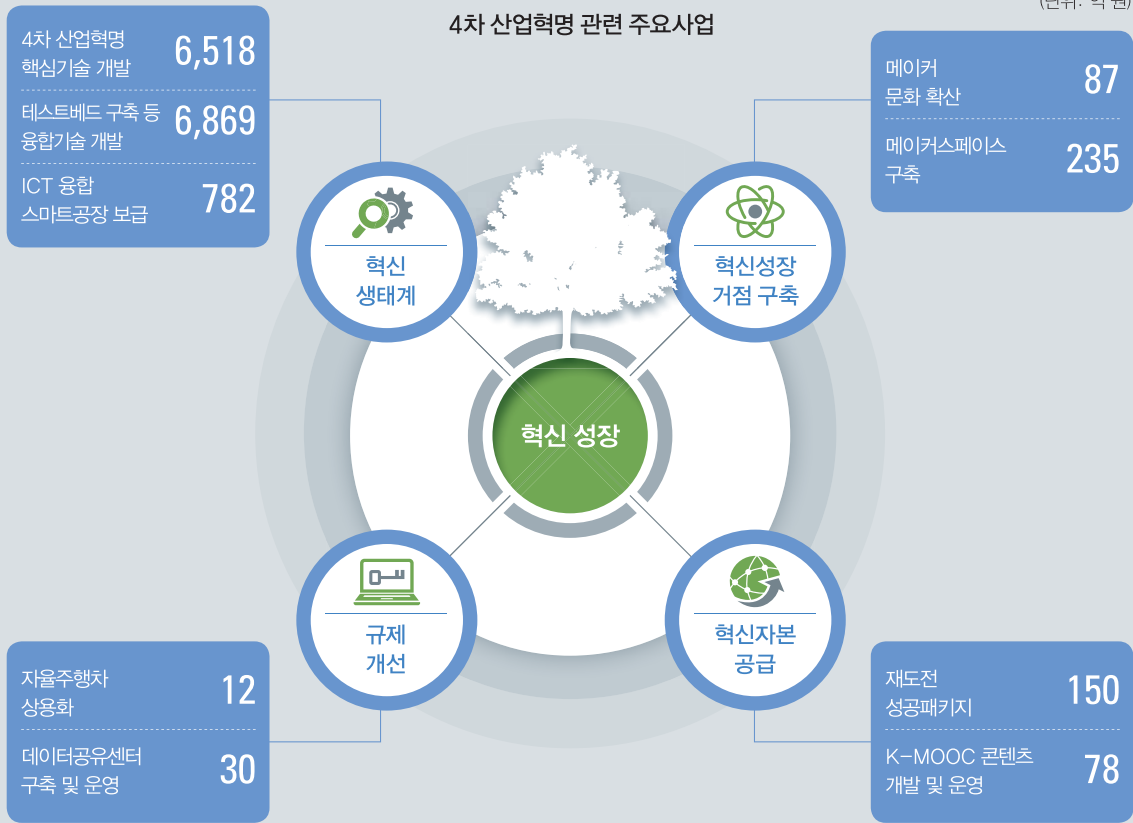
자료: 정책여론수렴시스템(2018. 1. 10.), 수집기간: 2017. 12. 1.~12. 31.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투자 확대

2018년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1) 핵심기술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 (2) 혁신성장 거점 구축, (3)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와 규제 개선, (4) 혁신자본 공급 확대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Keyword

키워드 재정



자료: 기획재정부,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2017. 8.)을 재구성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 개발에 6,518억 원을 투자하고,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6,869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² 보급에 782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공장 추진단(02-6050-2777, www.smart-factory.kr)에 접수하면, 현장실사 등 평가를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연동비용 등 총 사업비의 50%(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²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부터 생산, 유통·판매까지 제조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혁신성장 거점 구축

정부는 창업 토대를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메이커(maker)³ 문화를 확산하고(87억 원)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구축할 계획이다(235억 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상상구현터)과 고도화 장비를 갖추어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지역거점별 공간(창업연결터)을 만들어 사회저변으로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디어를 구현·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조성에 소요되는 장비 구입비 등 시설 구축 초기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공공기관 및 단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연계·공개함으로써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확장할 계획이다. 자율자동차 상용화사업(12억 원)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데이터를 업계·학계 등과 공유하고, 대전 데이터센터(통계청 본청)와 판교 데이터센터(판교 테크노밸리)에 보안장치 등을 갖춘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30억 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150억 원)을 수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을 준비 중인 성실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1억 원 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018년 2월과 6월에 받을 예정이며, 지원을 원하는(예비)재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혁신위험 분담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무크(K-MOOC, 78.4억 원)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대 등 총 70개 기관이 323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K-MOOC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³ 메이커란 1인 기업처럼 창의성을 발현하여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드는, 즉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람 등을 일컫는다.

⁴ 무크(MOOC)란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이다.

Q

의료업자 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 시 간 |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

| 장 소 | 국세청 본청

| 대 상 | 정완기 국세청 담당관실 조사관(cwgee@hanmail.net)

A

인터뷰 ● 김도일 재정운영지원팀 연구원(doylek@kptis.kr)

정부의 적극적인 탈루유형 발굴 및 엄정한 법적 대응 등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많지만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가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최근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인 의료업자의 카드 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해 누락된 매출액을 적출하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세무조사 중심의 사후적 관리방식에서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사전적 예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과소 신고되었던 201억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추징하는 등 세입원을 발굴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정완기 조사관을 만나 업무의 추진배경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정완기입니다. 2016년 전입하여 올해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국세청 주요 시책의 성과 확보, 실천사항 파악, 국세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인 의료업자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과세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2017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A 몇 년 전 〇〇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대표적 고소득사업자인 의료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용카드 환산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신고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면서 특정 의료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과세자료로 보험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의료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소 신고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단순히 그 사업자만의 실수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전입하여 〇〇〇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행하던 중 의료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여러 사례를 재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신고누락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료사업자의 매출누락이 일부의 문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세원의 사각지대였던 세원 적출로 재정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의료사업자의 수입금액은 ‘환자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 등이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본인부담금’은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보험급여’와 ‘건강보험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의료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환자본인부담금’은 최소한 환자들이 직접 결제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금액보다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를 수차례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에서 매월 3월 말 출력하여 의료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의료사업자 수입금액합산표’는 의료사업자가 매년 2월 중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보험수입금액과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보험자료 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생성하고 있었기에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 과정에서 단순히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보험수입금액 누락을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자본인부담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검증기능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자료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신용카드매출액이 사업자가 신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비교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생성되는데, 의료사업자는 2월에 신고하는 사업자현황신고서에 홈텍

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그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생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보다 '환자본인부담금'을 과소 신고하여도 과세자료로 생성되지 않아 세

당 초

2016년 귀속 의료사업자 수입금액합산표

2. 수입금액(매출액) 신고내역

(백만 원)

과세 사업자 면세수입금액		합계	1기			2기	
		0	0			0	
수입 금액	구분	합계	①비보험급여	보험급여	손해보험등	의료급여	기타수입
	합계	8,070	2,672	5,178	31	189	

3. 지급액 등 명세서

(백만 원)

번호	지급처 인적사항		지급금액			
	사업자등록 번호	지급처 상호 (자료 발생처)	보험자료금액			지급조서자료
			합계	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급금액
	소계		4,814	1,117	3,696	4,036
1	105*****	국민건강보험공단	4,618	1,100	3,518	4,003
		이하 생략				

변 경

2016년 귀속 의료사업자 수입금액합산표

2. 수입금액(매출액) 신고내역

(백만 원)

과세 사업자 면세수입금액		합계	1기			2기	
		0	0			0	
수입 금액	구분	합계	①비보험급여	보험급여	손해보험등	의료급여	기타수입
	합계	8,070	2,672	5,178	31	189	

3. 매출 과소 신고 혐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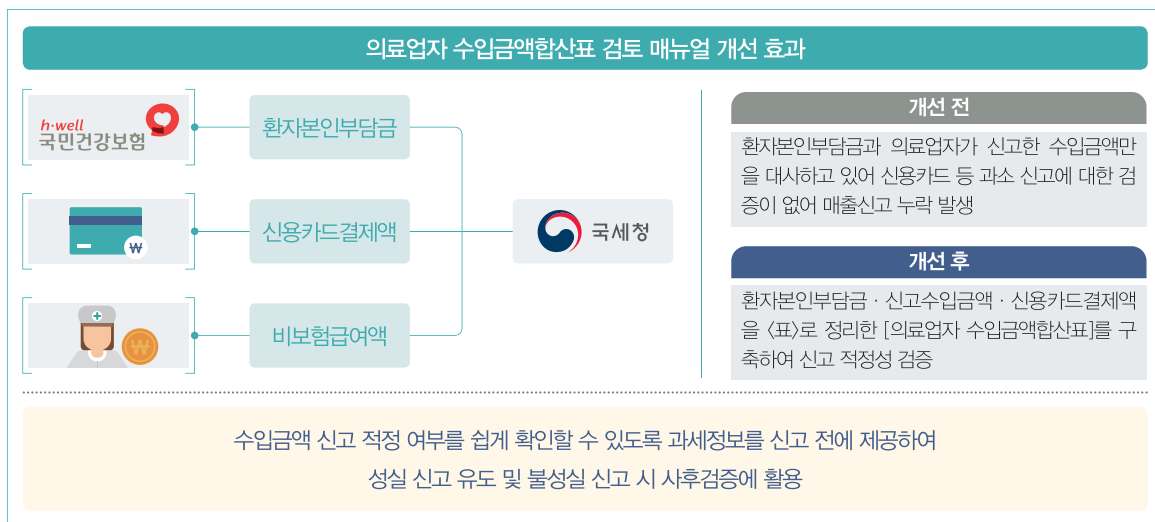
(백만 원)

자료금액			환자부담금			과소 신고 금액
합계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합계	비보험급여	본인부담금	
3,924	3,640	284	3,782	2,672	1,110	142

4. 지급액 등 명세서

(천 원)

번호	지급처 인적사항		지급금액			
	사업자등록 번호	지급처 상호 (자료 발생처)	보험자료금액			지급조서자료
			합계	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급금액
	소계		4,814	1,117	3,696	4,036
1	105*****	국민건강보험공단	4,618	1,100	3,518	4,003
		이하 생략				



원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일선 세무서 직원과의 대화, 국세청 소관과 직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신고내역을 안내하는 등의 매뉴얼 개선으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Q 업무추진으로 인한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의료업자를 추출하고 불성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과소 신고 혐의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과소 신고 금액의 수정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359명 가운데 1건의 불복청구 없이 자진하여 수정신고 하여, 총 20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2017. 6. 30. 기준).

Q 업무 추진 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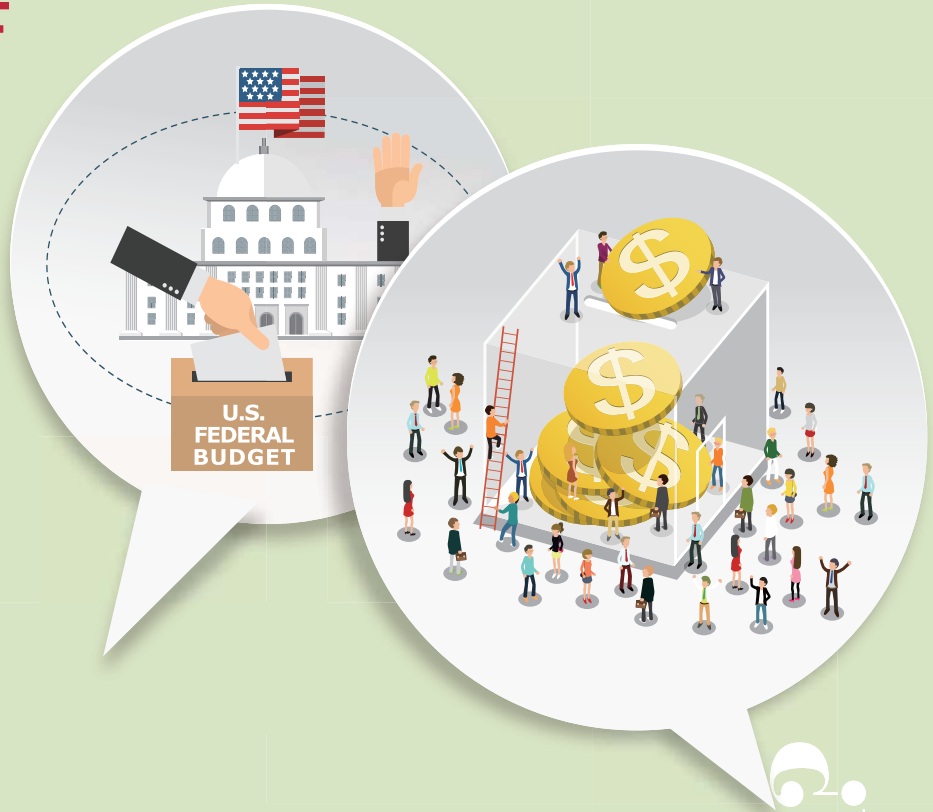
A 의료업자는 고소득자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인지 본인들이 과소 신고한 내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불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고 자료를 안내하고 1차 검증한 각 세무서 및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총괄 담당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Q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업무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의 세정은 세무조사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흔히 매출누락을 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미리 안내하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돕는다면 행정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의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단순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예산과정과 정부 셧다운

박소영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soyoungp@kpfis.kr



미국은 법률에 의거하여 세출을 승인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예산 편성권 및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이후 예산과정에서 의회가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었다.

이법으로 상·하원에 각각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설치하게 되었고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예산안이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정부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연방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연방공무원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정부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사용료 및 요금 등을 징수할 수 없으며, 정부서비스 중지로 인해 국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균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hutdown?

미국의 예산과정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되나, 행정부의 예산편성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각 행정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전달하는 전년도 봄부터 시작된다. 각 부처는 전년도 9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예산처에 제출하고 OMB는 요구서를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결과가 반영된 최종예산요구서를 회계연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다.

그 후 의회에서는 4월 15일까지 상·하 양원 예산위원회에서 합동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합동예산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원의 예산 총액, 분야별 배분 및 의무지출¹ 관련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예산결의안 의결 후 예산의 구체적 배분을 위해 세출위원회에서 세출법안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조정한다. 상·하의원이 각각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양원합동위원회가 구성된다. 동일한 내용의 세출법안이 양원에서 의결되면 행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은 이 법안을 10일 이내에 동의하든지 거부할 수 있다.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세출법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의회는 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CR)²을 의결하는데 계속결의안에 의거한 지출은 일정기간에 한한다(2018년의 경우 1월 20일 전까지).

〈표 1〉 미국의 예산과정

기간	예산 관련 내용
2월 첫 번째 월요일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서 제출
2월 15일	CBO는 예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	각 위원회는 검토 및 추계(views and estimates)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
4월 1일까지	상원예산위원회가 양원합동예산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
4월 15일까지	의회는 양원합동예산결의안을 의결
6월 15일까지	의회는 예산결의안에 맞추어 조정입법 심의완료
6월 30일까지	하원세출법안 심의완료
9월 30일까지	상원세출법안 심의 완료 ³ 로 세출법안 의결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 계속결의안 의결

¹ 의무지출은 수권법(authorization act)에 근거하여 지출된다.

²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금액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³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100석의 상원에서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 ADA)⁴에 따라 연방정부는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방, 교통, 보건, 소방, 전기 및 수도, 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필수분야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정사업분야도 제외된다. 사회보장연금(예: 노인의료보험제도,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등)과 군인연금 급여는 셧다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예산과정에서 의회가 주도권을 갖게 된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이후 역대 정부 셧다운 사례는 다음과 같다(표 2).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부 셧다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건강보험개혁법안에 합의하지 못하여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6일 동안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방정부 공무원들 약 850,000명이 강제무급휴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적정부담보험법’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며 국가부채한도 증액안에 합의함으로써 정부 셧다운은 종료되었다. 이어 4년 3개월 만인 2018년 1월 20일에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등 불법이민정책과 관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첫 번째 정부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는 역대 19번째 정부 셧다운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이민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정부 셧다운은 3일 만인 2018년 1월 23일에 종료되었다. 합의된 임시예산안의 효력이 8일에 끝나며, 양당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처리와 맞물려 다시 한 번 셧다운이 발생했다. 두 번째 셧다운은 만나질 만에 종료되었다.

⁴ ADA: 국고지출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적절한 기금의 수준을 넘어서 지출은 금지된다.

〈표 2〉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이후 정부 섰다운 사례

연도	날짜	기간	대통령	주요사유
1976	09/30~10/10	10일	Gerald Ford	노동 및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 560억 달러 지출법안 처리
1977	09/30~10/13	12일	Jimmy Carter	낙태비용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에 포함여부 문제
	10/31~11/09	8일		
	11/30~12/09	8일		
1978	09/30~10/18	17일		20억 달러의 니미조급 핵항공모함 구매를 포함한 370억 달러의 국방 관련 법안처리 문제
1979	09/30~10/12	11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5.5% 임금인상과 낙태 기금에 대한 문제
1981	11/20~11/23	2일	Ronald Reagan	예산삭감문제
1982	09/30~10/02	1일		지출법안을 제 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함
	12/17~12/21	3일		공공일자리 지출 증가와 MX미사일 자금문제
1983	11/10~11/14	3일		해외원조와 지출 삭감, 교육비 증액, MX미사일 지출 증가 문제
1984	09/30~10/03	2일		범죄소탕 패키지와 물 관련 계획문제
	10/03~10/05	1일		지출법안 논의를 위해 지연
1986	10/16~10/18	1일		복지 패키지 문제
1987	12/18~12/20	1일		Nicaraguan 반군 세력 자금 지원과 방송사의 평등한 방송시간 주장에 대한 합의문제
1990	10/05~10/09	3일	George H.W. Bush	대통령의 지출 법안 거부
1995	11/13~11/19	5일	Bill Clinton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보험료 인상문제
	12/15~01/06	21일		지출 삭감과 세금인상 문제
2013	09/30~10/17	16일	Barack Obama	적정부담보험법 동의 문제
2018	01/20~1/23	3일	Donald Trump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멕시코 장벽, 국방비 증액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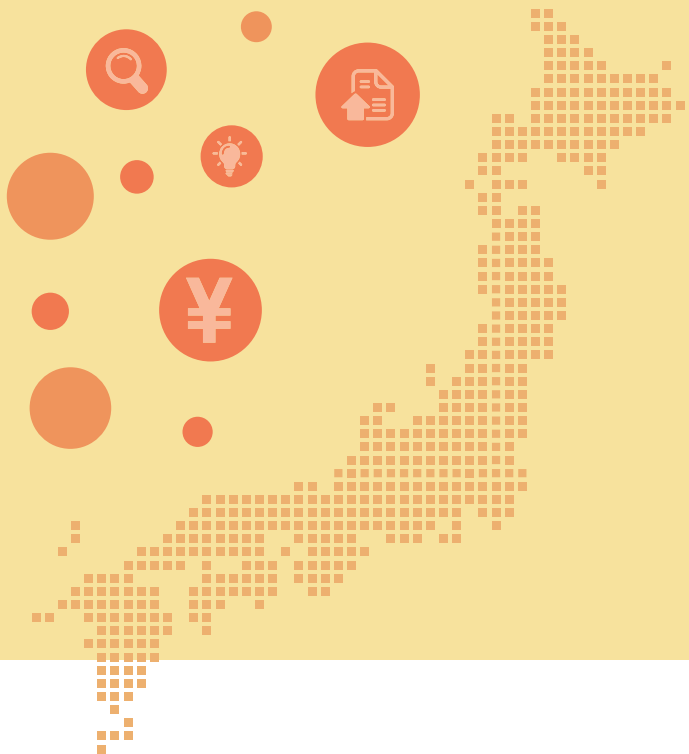
자료: Foxnews, 검색일: 2018. 1. 19.

참고 문헌

- 하연섭(2014),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18), Q&A: Everything You Should Know About Government Shutdowns Updated: January 10, 2018.
- Jennifer Earl(2018), A look back at every government, Foxnews.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2013), Impacts and Costs of the October 2013 Federal Government Shutdown

일본 2018년 예산안의 특징

김명규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mkim@kpfis.kr



1. 최근 일본 경제 여건

최근 일본 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며 2018년 경제성장률도 1.8%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소폭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1%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소비세를 인상했던¹ 2014년을 제외하고 1% 이내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고용분야는 실업률이 2012년 4.3%에서 2017년 2.8% 줄어들면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표 1 일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조 엔,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0.8	2.6	-0.3	1.4	1.2	1.9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0.3	0.9	2.9	0.2	-0.1	0.7	1.1
실업률	4.3	3.9	3.5	3.3	3.0	2.8	2.7

주: 2016년 이전은 실적 값, 2017년은 추정 값, 2018년은 전망 값임

자료: 일본 재무성, Highlights of the Draft FY2018 Budget, 2017. 12.

¹ 일본의 소비세율은 1989년 도입 시 3%였으며, 1997년 5%로 인상, 2014년 4월 8%로 인상되었고, 2015년 10월 10%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2017년 10월로 연기하였으나, 2019년 10월로 재연기하였다.

²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8일 “新しい経済政策パッケージ(신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2. 2018년 예산안 총량

2018년 예산안은 최근 경제여건과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Abenomics) 목표, 그리고 새로운 경제정책²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2018년 예산 규모(총계기준)는 97.7조 엔으로 2017년 97.5조 엔 대비 0.3% 증가하였다. 국채 상환과 이자비용 지급을 위해 예산의 23.8%인 23.3조 엔을 국채비로 편성하고, 일반지출로 58.9조 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으로 15.5조 엔을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일반지출이 0.9% 증가한 반면, 국채비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각각 1.0%, 0.3% 줄었다. 세입은 조세수입 59.1조 엔(세입 총계 대비 비중 60.5%), 공채금(국채발행)으로 33.7조 엔(34.5%), 세외수입으로 4.9조 엔(5.1%)을 충당할 계획이다.

표 2 2018년 예산안 지표(총계 기준)

(단위: 억 엔,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B-A)	증감률
	(A)	비중	(B)	비중		
세입	974,547	100.0	977,128	100.0	2,581	0.3
조세수입	577,120	59.2	590,790	60.5	13,670	2.4
세외수입	53,729	5.5	49,416	5.1	-4,313	-8.0
공채금(국채발행)	343,698	35.3	336,922	34.5	-6,776	-2.0
세출	974,547	100.0	977,128	100.0	2,581	0.3
국채비(국채상환, 이자)	235,285	24.1	233,020	23.8	-2,265	-1.0
일반지출	583,591	59.9	588,958	60.3	5,367	0.9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155,671	16.0	155,150	15.9	-52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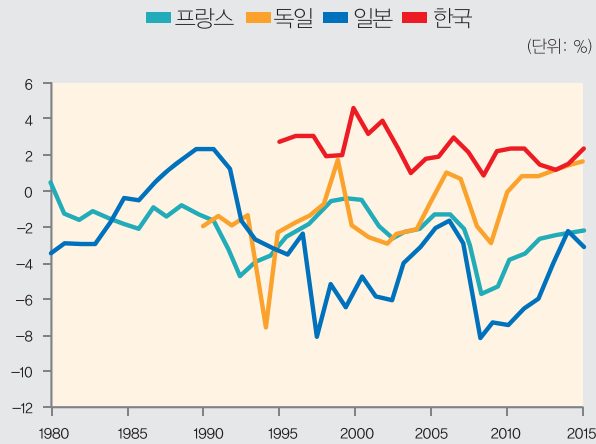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16년 기준 239.3%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1980년대 말 일본 부동산과 주식 버블 붕괴 이후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부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였고, 국채 상환 부담을 다시 국채 발행으로 상환하면서 부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재정수지도 1992년 GDP 대비 0.5% 흑자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998년 GDP 대비 10.2% 적자로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한 이후, 국채 발행 비중(2012년 47.6%→2018년 34.5%)을 줄여가면서 2010년 이후 국채 비율과 재정 적자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³

³ 중앙정부 2016년 국채 잔액은 1,080.4조 엔으로 2012년 대비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경상 GDP는 같은 기간 2.2%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국채 비율 축소 효과도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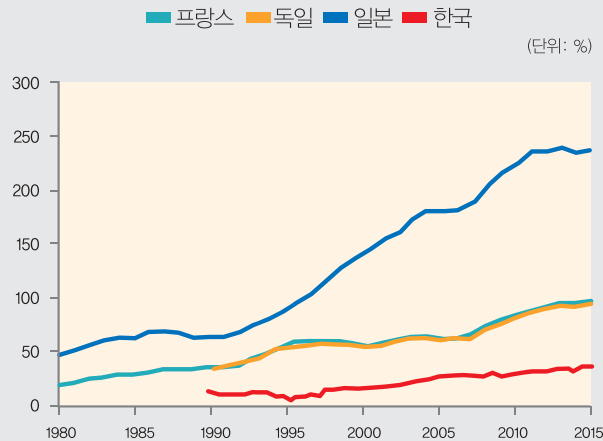
주요국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자료: IMF, 일반정부 기준 net lending/borrowing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
국채 비율



자료: IMF, 일반정부 기준

3. 2018년 중점 투자 방향

2018년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보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27.7%로 이미 초고령 사회이고, 출산율도 2005년 최저치를 기록한 1.26명으로 이후 2016년 1.44명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 장기 경제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생산성 강화 사업을 담아 2018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투자방향은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 대책 등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 대비 33.7%를 지출한다. 일반지출 대비로는 56.0%에 이른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2020년까지 32만 명 아동 보육시설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는 11만 명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 예산으로 115.2억 엔을 편성하는 등 보육 서비스를 강화한다. 5세 이하 유아교육 무상화는 20~30대 보육 경감을 위해 도입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보육사 및 간병 근로자 임금을 1.1% 인상하는 등 보육 정책을 강화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학금 보조를 늘릴 계획이다. 생활보호대상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2017년 0.3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하는데 105억 엔을 투자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무이자장학금 자격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진료 수가 개정, 조제약 단가 조정과 장애복지 서비스 보수를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생산성 향상 투자방향은 일본 경제가 지속적인 임금 상승⁴과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공공사업 분야에 전년 대비 26억 엔 증가한 6조 엔 예산을 편성하였다.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의 핵심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62억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승계를 위한 조치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내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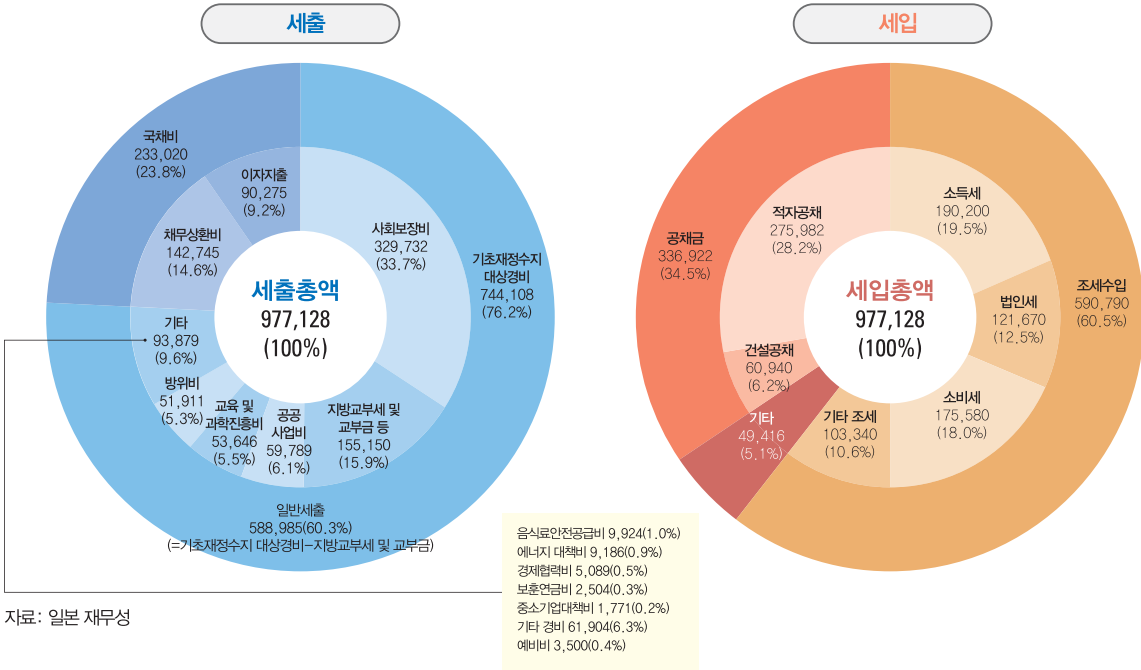
공공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도쿄 인근 3대 도시 권역도로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LNG 병커링 거점사업과 호우·태풍 재해 방재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고효율·고속 AI 칩 연구 개발에 100억 엔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양자 컴퓨터 등 광·양자 기술개발 및 나노기술 및 부품 분야 개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에도 19억 엔 투자하여 기술혁신과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드론, ICT, AI, IoT 등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실험·실증 지원 사업(12억 엔)을 통해 하수도시설관리 비용절감 방안 등 공공분야 혁신에 활용하는 등 질적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

4. 3% 이상의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IoT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면 20%로 각각 인하하기로 하였다(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30.86%).

그림 3 2018년 예산안 세출/세입 구조

(단위: 억 엔)



〈참고〉 일본의 예산 수립과정

일본 예산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회의 의결형식으로 성립되고, 세출·세입 모두 의결 대상이다. 일본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심의, 집행, 결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일련의 흐름은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유사하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예산 편성은 행정부 인 내각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월 말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 의원내각제 특성⁵상 국회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예산안이 큰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예산안은 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시작하였다.

표 3 일본의 예산 편성·심의 과정

시기	주요 일정
7월 중	차년도 예산안 작성 기본 방향,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 건의
9월 말	각 부처는 차년도 예산 요구서를 재무성에 제출
12월 중순	재무성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검토, 정부 예산안 확정 재무성이 정부 예산안을 내각에 제출
1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3월 말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4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⁵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또는 정당 연합)이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표 4 2018년 예산안 일반지출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억 엔,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B-A)"	증감률
	(A)	비중	(B)	비중		
일반지출	583,591	100	588,958	100	5,367	0.9
사회보장비	324,735	55.6	329,732	56	4,997	1.5
교육 및 과학진흥비	53,567	9.2	53,646	9.1	79	0.1
보훈연금비	2,947	0.5	2,504	0.4	-443	-15
방위비	51,251	8.8	51,911	8.8	660	1.3
공공사업비	59,763	10.2	59,789	10.2	26	0
경제협력비	5,110	0.9	5,089	0.9	-21	-0.4
중소기업 대책비	1,810	0.3	1,771	0.3	-39	-2.2
에너지대책비	9,635	1.7	9,186	1.6	-448	-4.7
음식료 안정공급비	10,174	1.7	9,924	1.7	-250	-2.5
기타 경비	61,098	10.5	61,904	10.5	806	1.3
예비비	3,500	0.6	3,500	0.6	0	0

자료: 일본 재무성

표 5 2018년 조세수입 구성

(단위: 억 엔,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B-A)"	증감률
	(A)	비중	(B)	비중		
조세수입	577,120	100	590,790	100	13,670	2.4
소득세	179,480	31.1	190,200	32.2	10,720	6
법인세	123,910	21.5	121,670	20.6	-2,240	-1.8
상속세	21,150	3.7	22,400	3.8	1,250	5.9
소비세	171,380	29.7	175,580	29.7	4,200	2.5
주세	13,110	2.3	13,110	2.2	0	0
담배세	9,290	1.6	8,740	1.5	-550	-5.9
휘발유세	23,940	4.1	23,300	3.9	-640	-2.7
석유가스세	80	0	80	0	0	0
항공기연료세	520	0.1	520	0.1	0	0
석유석탄세	6,880	1.2	7,090	1.2	210	3.1
전원(電源)개발촉진세	3,130	0.5	3,230	0.5	100	3.2
자동차증량세	3,700	0.6	3,950	0.7	250	6.8
국제관광객세(가칭)	-	-	60	0	60	-
관세	9,530	1.7	10,220	1.7	690	7.2
토세	100	0	100	0	0	0
인지수입	10,920	1.9	10,540	1.8	-380	-3.5

주 1) 토세는 해운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순톤수와 운행일지를 기준으로 톤당 법인세율을 곱해 부과하는 조세

2) 전원개발촉진세는 댐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시설 등 개발에 총당하기 위한 목적세

자료: 일본 재무성

참고 문헌

- 일본 내각부, (2017),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 주노중, 이우형, (2017), "일본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pp.153~175.
- Ministry of Finance Japan, (2017), Highlights of the Draft FY2018 Budget
- Ministry of Finance Japan, (2017), Public Finance Statistics Book(FY2018 Draft Budget)
- IMF Data, <http://www.imf.org/en/data>, (검색일: 2018. 1. 30.)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의 세금정책

하연수

hayonsu@naver.com

서기 610년 무렵 로마제국 이후 세계경제는 이슬람세계의 강한 영향력하에 있었습니다. 큰 번영을 이룬 중세의 이슬람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지요.

당시 이 지역에는 인두세와 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이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교회와 손잡고 가혹한 세금징수를 실시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은 과중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인두세를 면제한다'고 주창하였습니다. 인두세 때문에 고생하던 기독교인들이 앞 다퉈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제국의 세금징수는 정복지에 대해서도 관대하였습니다. 예컨대 이슬람제국이 정복하기 이전, 이집트에서는 토지세를 금화 또는 은화만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슬람제국에서는 이를 금화나 은화 외에도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곡물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슬람교도가 가축의 방목 등으로 조금이라도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Islam

온정 넘치는 세무행정으로
번영 누린 이슬람제국

Osman Empire

또한 인두세는 이교도의 상인에게만 부과시키고 이슬람교도나 농민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교도의 상인들도 불경기 때에는 면세 받았지요.

서기 636년, 이슬람제국은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로부터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제국이 이 땅을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자 이슬람제국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슬람제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우리 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기에 보호의 대가인 인두세를 환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인두세를 낸 주민들은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던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은 감격하며 쳐들어오는 로마군에게 적대감을 품었지요.

이슬람제국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온정 넘치는 세무행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분열되어 세력이 약화된 이슬람권이지만 마호메트의 사후 600년이 지나 초기 이슬람제국의 성질을 강하게 이어받은 대제국이 탄생합니다.

바로 오스만튀르크제국입니다.

오스만튀르크는 1299년 터키 부근의 오스만이라는 작은 호족에서 발전된 국가입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전반에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1453년에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도 공략하여 로마제국의 후예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오스만튀르크는 중세를 거쳐 20세기까지 무려 6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오스만튀르크가 번영한 요인 중 하나는 뛰어난 조세시스템이었습니다.

오스만튀르크에서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중앙집권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반면 중세의 서구국가들은 대부분이 봉건제도였습니다.

봉건제도라는 것은 국왕이 통치하긴 하지만 국가의 대부분은 귀족이나 호족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서구에 한정하지 않고 당시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은 봉건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국왕들이 실제로 지배하는 토지(세금징수권을 지닌 토지)는 국가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때문에 중세의 서구의 국왕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디폴트를 일으킨 국왕도 제법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오스만튀르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세금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오스만 튀르크에는 32개의 주가 있었는데 이 주는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를 티마르라고 불리는 것으로 오스만제국이 파견한 관료들에 의해 세금징수와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2개 주 중에서 23개 주가 티마르였습니다.

또 하나는 살야네인데, 이는 자치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국정부는 총독을 파견하여 군도 주둔시켰지만 행정 등은 현지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중앙정부에 보내는 시스템이었으며, 32개 주 중에서 9개 주가 살야네였습니다.

오스만튀르크가 강력했던 것은 이 중앙집권제가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제가 발달되었기에 정부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세금을 모아 운백한 자금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스만튀르크의 군인들의 봉급기록을 보면 1609년에 보병 3만 8천 명, 기병 2만 명, 포병 1,500명, 포차병 700명, 그 외 6,000명으로 총 6만 6,200명에 이르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상 시에도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구국가들은 그토록 강력한 상비군은 보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병사는 전쟁 때 모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싸우는 경우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불을 보듯 뻔하였지요.

이와 같은 선진화된 제도에 의해 오스만튀르크는 1453년부터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까지 450년 동안 지중해와 중근동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총사업비시스템 및 열린재정 오픈

한국재정정보원은 '17년 dBrain 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총사업비시스템과 열린재정 등 2개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18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하였다. 총사업비시스템은 1월 12일(금) 오픈하여 운영 중이며,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낙찰차액 관리강화로 재정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월 25일(목)에는 리뉴얼된 열린재정 홈페이지 및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총 164종의 재정통계 자료, 267종의 경제 관련 통계, 61종의 시각화 자료 및 60여 종의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18년 1월 16일(화) 제2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 확정되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란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국가에서 보호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17년 1월,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최초로 대두(기획재정부 제2차관 검토지시)된 이후 현장조사와 자체평가 및 정보통신 기반보호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체계적인 보호대책 수립과 적용으로 내·외부 보안 위협에 대해 한층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정정보원 준정부기관 지정

'18년 1월 31일(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은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금번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라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나라도움 중복부정수급 관련 사용자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 중복부정수급 기능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등 일선 사용자의 업무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2월 1일(목)부터 27일(화)까지 서울, 강원, 제주 등 7개 광역시도에서 중복부정수급 관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e나라도움 내 부정수급 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의 예방 및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스터디 연수단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18년 1월 23일(화) 방글라데시 재무부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스터디 연수단은 공공재정관리, 공기업 거버넌스 역량 강화 연수의 일환으로 세계은행 거버넌스 담당자와 함께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반영된 dBrain시스템을 소개하고, 관련 시스템 기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정보원 설립 배경 및 국제협력 전략 등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과테말라 KSP 관련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18년 2월 6일(화) 과테말라 국가기획처 KSP사업 담당 공무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의 재정개혁과 dBrain 구축 경험을 발표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반영된 dBrain 시스템의 소개 및 관련 기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원 설립 배경 및 주요 기능과 국제협력 전략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

정부의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201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2월 9일(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



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5조 원, 총세출은 342.9조 원, 세계잉여금은 11.3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본 마감 결과를 기초로 정부는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친 뒤 5월 31일(목)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월간

나라 재정

FEBRUARY
2018 Vol. 14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t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조은미(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FEBRUARY
2018 Vol. 14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